

“윤 정부 무분별한 감세 기조 정상화해야”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 해법’ 세미나

오기형 “감세 경쟁 자체 촉구…상속세 폐지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오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제외한) 192명의 의원들에게 감세 경쟁을 하지말자고 서한을 만들어서 돌렸다”며 “경제 성장 속에서도 세수가 줄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

식”이라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법안은 국민의힘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 틀에서 추진 의지를 보였던 의제다.

오 의원은 의원실 명의로 낸 토론 자료집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 금액이 1996년 세법 개정 당시 5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으며 이를 상향하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혜택을 보는 최대 인원은 전체 피상속인의 약 0.1%”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시 상속세와 사망 전의 증여세는 같은 성격이다.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재정 등과 연계되므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주택자 증과세 폐지 논의도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증과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적절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김영환 의원도 감세 정책에 대한 신중론을 표했다.

김남근 의원은 “차기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재정 정책을 써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늘리기 위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세수 평가가 났는데 그걸 또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든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세를 반대

시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재정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종합적인 조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기조를 정상화하고 조세 정의에 기반한 세입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며 “특히 감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도그마에 빠져 경기를 침체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감세 정책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수결손이 문제가 되었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과세수가 문제가 됐다”고 했다.

/뉴시스

국힘 대선 김문수·한동훈 결선행

안철수·홍준표 탈락…50% 이상 득표자 없어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하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2차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다. 이후 후보별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와 4인 토론회를 거쳐 지난 27~28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를 실시해 상위 2인을 3차 경선 진출자로 선출



했다.

당초 이번 2차 경선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날 2차 컷오프를 통과한 두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당원 투표 50%’ 방식의 3차 경선을 거친다.

韓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제한法 헌법 상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승만·박정희 참배가 국민통합인가”

광주비상행동 성명 “내란 청산부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치쇼에 의존하지 말고 내란 세력의 온전한 종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첫 일정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며 “정치 양극화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참배의 명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과 박정희는 12·3 내란 세력의 뿌리이다. 권력을 위해 국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를 통해 집권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우리 정치를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로 내몬 자들”이라며 “어떻게 이들의 참배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다른 점을 찾아내 경쟁하는 동시에 공통 목표를 찾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옳다”며 “그러나 극단적 이념을 내세워 국민을 학살하고,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위헌적인 헌법을 만들어 영구 집권을 정당화하는 자들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극단적인 혐오와 대결 논리로 대한민국 정치를 양극화해 온 극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통해 통합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 세력의 뿌리인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참배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으며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우리 정치를 극단적인 양극화의 길로 내몬 자들”이라며 “어떻게 이들의 참배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룬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도기 기자

“정부, 한전공대 예산 삭감 철회해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29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KENTECH)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정부는 지난 2019년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통해 한전공대에 최소지자체 수준의 지원을 명문화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개교 당시 250억원이었던 정부 출연금은 지난해 200억 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불과 10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삭감 탓에 연구동 건설이 완료돼도 핵심 연구 장비 도입

과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연구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며 “(한전공대 대상) 예산 삭감은 과거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로 깊은 좌절을 겪었던 광주·전남에 다시 상처를 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전공대에 대한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당초 약속 수준인 연 200억원 이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표적 감사, 총장 해임 압박 등 한전공대를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율 운영과 연구 활동을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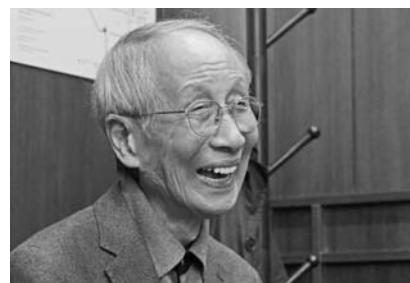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 게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윤여준 “이재명, 가장 유력한 후보…경제 전문성 있어 다행”

민주 이재명, 윤 전 장관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라며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재명 후

보를 돕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니까 가능한 그 분이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차기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국가 운영을 책임진 분은 경제가 최우선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안보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경제 쪽에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문외한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전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데 대해서는 “좋게 봤다”고 호평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국가를 맡아서 통치했던 분들이고 공과가 다 있으니가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출마를 고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대행이 어떤 형태로 가세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까.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하고 있는 소임을 다 끝내면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임을 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 아닌가. 그 다음 평가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검찰 출석 명태균 “김건희, 김상민 검사 쟁겨달라 해”

“오세훈 7번 이상 만나…관련 수사 꼭지만 20개 넘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김상민 검사를 쟁겨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29일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쟁겨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김영선 의원은 공기업이나 장관직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의사를 타진했다”며 “여야

를 뛰어넘어 집권 2년 차인 영부인이 사로부터 ‘김상민 검사를 쟁겨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천이 주변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게 이뤄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안 이뤄졌으면 아니다. 검찰이 많은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해단식에서 “더 이상 정치 안하겠다”며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국민과 당원들께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며 “저는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통과 거리에서 부담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을 맡은 김대식 의원은 “참모인 제가 부족했다”며 “30년 동안의 당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홍 후보께서 이러한 결과를 받고 보니 제가 보필을 잘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우리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배 캠프 대변인은 “지난 3주간 홍 후보님을 모시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다,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켜줄거라 생각했다”며 “이제 후보께서 경선 결과를 수락하셨기에 지지해주셨던 많은 동지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다시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